

독일 총선결과와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독일

이승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 머리말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적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 연방 총리를 결정하는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가 지난 9월 22일 실시된 바 있다. 4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독일의 연방하원의원 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연방정부가 구성되고 연방총리가 새롭게 선출되는 등 독일 내 정치에서 가장 중요성을 지닌다. 독일이 유럽연합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인하여 독일의 선거결과는 유럽연합의 정책적 연속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 유럽의 관심이 독일의 총선을 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2005년 대연정을 시작으로 2기에 걸쳐 독일 정부를 이끌고 있는 현 여당인 기독교민주연합(CDU, 이하 기민당)-기독교사회연합(CSU, 이하 기사당)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40% 이상의 득표율(41.5%)을 기록하며, 총 630석 중 과반수에 4석 모자란 의석인 311석을 차지하는 대승으로 막을 내렸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기민-기사당 연합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였던 파트너 정당인 자유민주당(FDP, 이하 자민당)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하였고, 비례대표 득표율 역시 비례대표 의석배분 기준 득표율인 5%에 미달(4.8%)하면서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의회 진출에 실패하였다.¹⁾

이러한 선거결과를 두고 다양한 반응과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항

1) 독일 「연방선거법 제6조 제3항」 참조.

은 연정 파트너의 교체로 인한 정책적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 후 아직은 연방총리 선출 및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 독일 정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연방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을 중심으로 기민-기사당 연합진영과 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 사이에 연합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2005년에 이어 다시 한번 양대 정당의 거대연합정권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된 이번 선거였으나 새롭게 출범할 차기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난 정부의 야당 진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선거결과로 인해 연정 구성과 함께 앞으로의 정책적 향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2013년 독일 총선결과: 기민련(기사련) 진영의 압승

독일의 기본적 정치체계와 연방하원 선거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16개의 주로 나뉘어 있으며 지방자치적 성격이 강한 정치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며, 주 정부의 대표가 성원이 되는 연방상원과 달리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연방하원에게 연방총리의 선출, 법률의 제정 등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4년을 임기로 하는 독일 연방하원의회 선거는 총 598석의 의석 중 50%인 299석을 제1투표인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나머지 의석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하게 된다.²⁾ 의석배분방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는 연방하원은 이번 선거에서도 법정 의석인 598석에서 32석 늘어난 630석이 되었다.

연방총리는 연방대통령이 하원의회에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방하원의 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관례상 연방대통령은 연방하원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2) 독일 「기본법 제39조」 및 「연방선거법 제1조」 참조.

정당의 연방총리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하원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 총리로 선출된다.³⁾ 독일의 경우 연방총리가 정치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책임 정치를 펼친다는 측면에서, 독일 국민에게는 연방총리의 선출권을 가진 연방 하원의 선거가 자신의 손으로 독일 정치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진 선거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연방하원의회 선거결과

9월 22일 실시된 독일 연방하원 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 61,903,903명 중 44,289,652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지난 2009년 총선에 비해 약 0.7% 상승한 71.5%를 기록하였다. 투표 결과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이 총 630석 중 311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민-기사당 연합의 승리는 지난 1년간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꾸준한 지지율을 통해 이미 예견된 바 있다.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방식에 따라 직접선거인 1차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총 299석의 의석 중에서 각 정당이 차지한 의석은 기민당이 191석, 기사당은 45석으로 기민-기사당 연합이 236석을 차지하였으며, 시민당은 58석, 좌파당(Die Linke) 4석, 녹색당(Grüne)이 1석을 획득하였다.

정당에 대한 비례투표인 2차 투표에서는 기민당이 34.1%, 기사당은 7.4%로 기민-기사당 연합의 득표율은 41.5%를 기록하며 1998년 선거부터 30%대로 하락하였던 득표율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09년 선거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시민당은 지난 선거에 비해서는 득표율이 다소(약 2.7%)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20%대인 25.7%를 기록하며 기민-기사당 연합과의 지지율 차이는 더욱 증가하였다. 의회에 진입한 나머지 정당으로는 좌파당이 8.6%, 녹색당이 8.4%를 득표하며 모두 4개의 정당이 의석배분 기준인 5% 득표율을 넘어섰다. 2차 투표에 따라 우선적으로 598석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 결과는 기민당 242석, 기

3) 2차 대전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아직 단일 정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 단독으로 총리를 배출하며 정부가 구성된 예는 없다.

사당 53석, 사민당 182석, 좌파당 61석, 녹색당 60석이었으나, 각 정당에서 발생한 초과 의석과 그로 인한 보정의석의 부여로 299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331석으로 증가하였다. 기사당 3석, 사민당 1석, 녹색당 1석으로 모두 5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한 가운데, 발생한 초과 의석을 모두 인정하되 각 정당의 2차 득표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정의석을 부여하도록 한 「연방선거법 제6조 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계산된 의석(초과 의석+보정의석)은, 기민당 13석(0석+13석), 기사당 3석(3석+0석), 사민당 10석(1석+9석), 좌파당 3석(0석+3석), 녹색당 3석(1석+2석)이 되어 모두 32개의 의석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추가 의석의 배분 결과 2차 투표에 따른 비례 의석의 수는 기민당 64명, 기사당 11명, 사민당 134명, 좌파당 60명, 녹색당 62명으로 배분되었다.

결과적으로 직접투표 및 비례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수는 총 630명으로 지난 2009년 선거보다 8석이 증가하였으며, 기민당 255명(+61), 기사당 56명(+11), 사민당 192명(+46), 좌파당 64명(-12), 녹색당 63명(-5)으로 의회가 구성되었다.⁴⁾

반면 지난 2009년 선거에서 14.6%의 높은 지지율로 93석의 의석을 획득하며 연정 파트너로서 정부를 구성하였던 자민당은 2차 투표의 득표율이 5%에 미달하면서 2차 대전 이후 실시된 연방하원 선거에서 최초로 원내 진입에 실패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으로 기록되었다.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

이번 선거에서 기민-기사당 연합의 높은 지지율은 매주 발표되는 정당 지지율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항이다. 이는 본격적인 선거 시즌에 돌입한 이후에도 지지율에 변동을 가져올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뤄진 선거였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여당인 기민-기사당에 대해 국민들이 40% 이상의 지지를 보낸 이유에는 유로존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독일의 경제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

4) 괄호 안은 지난 2009년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 수와의 편차이다.

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이 의석확보에 실패하면서 현재의 여당 진영(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 연정)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이 더욱 극명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기민-기사당 연합 정당이 거둔 승리라기보다는 연방총리인 메르켈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자민당이 하원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창당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에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이슈가 단지 유로존의 위기와 그에 대한 독일 정부의 대처만은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자민당의 이번 선거 실패는 자민당이 지속적으로 고수하였던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친기업적 정책에 대해 더 이상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표심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테마가 무엇이었는지 묻는 설문에서 ‘적정한 임금과 근로조건’과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던 결과를 통해서도 반증된다.⁵⁾

이번 선거의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정치권에 대한 독일 국민의 요구는 유로존의 경제위기와 장기적인 침체 속에서 유럽과 독일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과 더불어 지난 10년 이상 지속되었던 노동시장의 개혁과 유연화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정의와 공공성의 확대를 집약할 수 있다.

독일 국민의 우선적인 관심이 유로존의 경제위기 극복에서 사회적 의제로 다소 균형추가 기울어지면서 기민당 내부의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정부가 국정운영 과정에서 좌파적 정책을 흡수하였던 것이 이번 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선거 결과는 유로존의 경제위기 속에서 유럽연합과 독일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는 메르켈이 합격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개혁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의제에 관심도가 높은 정당이 정국 운영에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의석확보에 실패하면서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이상 현재 야당

5) 타게스샤우(Tagesschau)지, “Zahlen und Umfragen zur Bundestagwahl”, 2013.9.23, S.20, <http://www.tagesschau.de/multimedia/bilder/uvotealbum118.html>

진영의 정당이 차기 정권에 함께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연합정부 구성 정당의 변화는 메르켈이 흡수한 사회적 정책의 제안 정당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노동 및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주요 정당의 노동관련 공약

기민-기사당(CSU-CDU) 연합⁶⁾

사회적 시장경제를 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은 전통적으로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만을 활동영역으로 하는 지역 정당인 기사당(CSU)은 기민당(CDU)과의 연합을 통해 연방정당으로서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선거공약 역시 양당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선거공약집 서두에서 10개의 핵심 프로젝트로 공약 내용을 집약하였는데 그 가운데 세계 경제 속에서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르켈 정부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산업활성화와 수출증대 등 경제적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적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지난 2기 동안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같은 친기업적 성격의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직업교육 강화 등을 그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민-기사당 연합의 노동관련 공약은 메르켈 정부의 지난 8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반기 고용지표상 기록적이었던 노동활동인구가 후반기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6) (Hrsg.)CDU-Bundesgeschäftsstelle, Gemeinsam erfolgreich für Deutschland – Regierungsprogramm 2013 – 2017 참조.

고 있는 가운데,⁷⁾ 이들 정당은 이러한 양호한 고용지표를 지난 8년간의 성과물로서 그 이전 사민당 정권의 노동시장 상황과 비교하고 있다.

노동과 관련한 기민-기사당 연합의 기본적인 인식은 ‘단체협약체계의 강화’에 있다. 즉 기본적으로 단체협약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직접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관련 정책 중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었다. 지난 2005년부터 논의되어 온 법정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메르켈과 연방 노동사회부 장관인 우줄라 폰 데어 라이엔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⁸⁾ 지난 2012년 4월 당시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민-기사당 연합 측이 제시하였던 최저임금에 대한 법안은 단체협약을 통한 최저임금의 설정을 기본으로 하고 단체협약의 적용이 없는 영역에서도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저임금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⁹⁾ 이번 선거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기민-기사당 연합의 정책은 특별한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정치는 모든 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바탕을 마련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고,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수준과 금액의 결정은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체계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정치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임금과 관련하여 기민-기사당 연합은 ‘동일 사업장,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공약 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산업영역을 불문한 법정최저임금을 채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시간제근로, 미니잡,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의 시정하고자 마련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인 “Perspektive 50plus”, 상담지원제도의 강화, 노동자의 기업경영상 자본참여제도의 개선 등도 공약 내용에 포함하고 있으며, 내

7) 연방통계청 (Destatis) 언론보도용 자료, Weiter steigende Erwerbstätigkeit im August 2013(2013. 10. 1).

8) 독일의 최저임금에 관한 더 자세한 서술은, 졸고, 「독일 최저임금제 평가 및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11(2), p.76 이하 참고.

9) 타게스샤우(Tagesschau)지, “Das Mindestlohn-Konzept der Union steht”, 2012. 4. 25, <http://www.tagesschau.de/wirtschaft/mindestlohn314.html>

용상 교육제도에 포함된 직업교육의 강화 및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가족 정책에 포함된 가족친화적 고용제도(예 :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 30시간 근로제도)도 있다.

사민당(SPD)¹⁰⁾

독일 국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 탄생할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사안 중에서도 노동관련 의제인 ‘일과 가정의 양립’,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과 같은 내용에 높은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사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26%)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¹¹⁾ 여기에는 무엇보다 사회적 의제들을 대거 수용하였음에도 사민당의 선거 공약 내용이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지 못하였던 것은 캠페인 과정에서 드러난 연방총리 후보자의 역량 부족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¹²⁾ 하지만 득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책적 의제는 메르켈 진영과 극명한 대비를 보인 증세 주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의 현실 정치는 여전히 당내 우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약 내용에는 당내 좌파진영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정당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균형성의 확보’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뒤를 이어 ‘금융자본주의의 억제’와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공약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정책에 관한 공약 중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사민당이 가장 이슈를 만들어 내었던 것은 역시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이었다. 사민당은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8.50유로의 법정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다. 사민당의 경우 노동시장 개혁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정책으로 2005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제 시행을 선거 공약으

10) (Hrsg.) SPD-Parteivorstand, Das Wir entscheidet – Das Regierungsprogramm 2013 – 2017 참조.

11) 타게스샤우(Tagesschau)지, “ARD-DeutschlandTrend im Morgenmagazin – Was sollte der Bundesregierung wichtig sein?”, 2013. 9. 27, <http://www.tagesschau.de/multimedia/bilder/crbilderstrecke506.html> 참고.

12) 타게스샤우(Tagesschau)지, “Umfragen Aktuelle Themen”, <http://wahl.tagesschau.de/wahlen/2013-09-22-BT-DE/umfrage-aktuelletemen.shtml>

로 포함시켜왔다.¹³⁾

사민당의 전반적인 노동관련 공약은 법정 최저임금제도와 마찬가지로 하르츠 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일반적 근로관계가 증가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을 통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미니잡 종사자에게도 휴가 보장, 해고 보호, 병가 시의 임금계속지급 등 사회적 보장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그 밖에도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의 확대, 기업별 공동 결정제도에서 종업원 평의회의 권한 강화, 복지예산의 증액, 보육시설의 확충 등과 같은 사항도 주요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녹색당(Grüne)¹⁴⁾

녹색당의 경우 유로존의 경제위기와 사회적 정당성의 회복이 격돌한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의 정책적 강점인 에너지 문제를 선거전에서의 이슈로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선거기간에 돌입하기에 앞서 지지율이 15% 수준에 이르면서 이번 선거에서의 선전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선거운동 시기에 들어서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발빠르게 원전 포기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실시한 메르켈 정부의 대응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 1회 채식의 날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이 이슈가 되면서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에 집중하지 못하는 녹색당의 모습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이탈했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사민당과 함께 증세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지층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원내 제3당의 지위마저 좌파당에게 내어주고 말았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

13) 타게스사우(Tagesschau)지, “Steinbrück verspricht Mindestlohn”, 2013. 1. 5, <http://www.tagesschau.de/inland/steinbrueck-mindestlohn100.html>

14) (Hrsg.)Bündnis 90/Die Grünen, Zeit für den Grünen Wandel – Bundestagswahlprogramm 2013 참조.

어서도 녹색당은 경제 및 노동정책이 에너지 정책에 비해 명확한 노선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정책으로는 전반적인 근로조건 중에서도 임금과 관련한 사항이 가장 중심에 놓여 있다. 역시나 노동시장 개혁 이후 증가한 저임금 근로자의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임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체계 강화와 함께 사민당과 마찬가지로 8.50유로의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예로 들며 ‘동일 노동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주장하였다. 그 밖에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의 확대, 공동결정 제도의 확대와 이를 통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문제 해결, 취업알선제도의 활성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녹색당의 사회적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던 사민당과의 차별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녹색당의 한계는 환경분야가 아닌 경제와 사회적 정책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며 국민들로부터 정국의 한 축을 담당할 정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좌파당(Die Linke)¹⁵⁾

구 동독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었던 민주사회주의당(PDS)과 사민당(SPD) 탈당세력을 기반으로 한 조직인 노동과 사회정의(WASG)가 2005년 선거에서부터 함께 활동하며 2007년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한 좌파당은, 이들의 당원 구성과 정당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좌파적 정책의 입안에 정당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선거의 공약에서도 사회적 연대의 강화를 기초로 노동환경 개선 및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노동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인 저임금 근로, 비전형 고용관계의 증가 문제에 관한 해법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파견근로 금지, 도급계약에서의 임금 덤핑 규제, 미니잡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 확대, 기간제 근로계약의

15) (Hrsg.)Die Linke, 100% Sozial – Wahlprogramm der Partei Die Linke zur Bundestagwahl 2013 참조.

무기근로계약 전환, 견습생 제도의 개선과 임금지급 강제, 실질임금 인상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전 산업 영역에 걸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의 형식을 채택하였으며 그 금액은 10유로로 책정하였다. 그 밖에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의 단축(주 48시간 → 주 40시간으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실질임금 인상도 공약의 주요 부분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좌파당의 공약 내용은 개혁과정에서 축소된 복지정책을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거나 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시장에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가 가능하더라도 현실 정치에서 이를 수용하기에는 다소 급진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 차기 정부의 구성 논의와 노동정책 전망

이번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야당 진영 중에서도 가장 좌파적 색채를 띠고 있는 좌파당은 연정 구성 논의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다. 녹색당보다 1석 더 많은 원내 제3당의 지위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인 기민-기사당 연합과의 간극이 너무 커 타협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민당-녹색당-좌파당이 연합하는 경우에는 과반 의석 이상이 되어 정부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사민당 진영에서 정국 운영능력의 부재를 이유로 좌파당과의 연합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에서 선거 이후 차기 정부의 출범을 위한 논의는 우선적으로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증세안과 같이 양 진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법정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경우에도 양 진영의 해법이 달라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한 차례의 연정협상 결과 양 진영의 협상 의지가 확인되어 사민당이 대연정에 참여하는 것에는 우선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차 회담 이후 사민당의 대표인 지그마르 가브리엘은 대연정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① 최저임금의 시행, ② 파견 근로/시간제 근로 등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③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라

는 세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¹⁶⁾ 일단 증세안은 사민당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연정협상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메르켈 총리 체제하에서 2005년 한 차례 대연정의 경험이 있어 현재의 정국에 대해 독일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독일 국민들은 경제분야는 기민-기사당 연합이, 사회적 문제는 사민당이 담당하여 정국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¹⁷⁾

사민당의 원내 진출 실패로 보수진영의 정당은 기민-기사당 연합이 유일한 가운데 노동 및 사회보장과 관련한 정책은 나머지 세 정당의 공약이었던 개혁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의 해결과 복지수준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 대연정에서는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활발하였음에도 독일의 경제가 안정세에 접어들기 이전이라는 한계점도 있었고, 무엇보다 개혁정책의 시발점이 사민당이라는 점에서 사민당이 다시금 좌파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혁의 과실을 메르켈 정부에 넘겨주고 난 지금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정치적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권의 이슈가 되었던 장기 실업급여인 하르츠 IV의 문제나 양육비 지원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었던 복지분야의 논쟁 주제는 이번 선거에서 표심을 움직이는 데 크게 작용하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주제인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사항이 노동정책과 관련한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는 측면도 사민당이 자신들의 색채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LI**

16) 슈피겔(Spiegel)지, "Sondierung mit der Union: Gabriel stellt drei Forderungen für Große Koalition", 2013. 10. 6,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spd-chef-gabriel-nennt-kernforderungen-fuer-grosse-koalition-a-926293.html>

17) 타게스샤우(Tagesschau)지, "ARD-DeutschlandTrend im Morgenmagazin - Was sollte der Bundesregierung wichtig sein?", 2013. 9. 27, <http://www.tagesschau.de/multimedia/bilder/crbilderstrecke506.html>